메리츠 금융 Daily

2020. 10. 15

meritz 메리츠증권

은행/지주 Analyst 은경완
02. 6454-4870
kw.eun@meritz.co.kr

보험/증권 Analyst 김고은
02. 6454-4871
goenkim@meritz.co.kr

News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연 0.50% 동결 — 조선일보

한국은행이 금융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연 0.50%로 동결... 경기 불확실성 지속되는 가운데 자산쏠림 등 부작용 우려 반영한 결과...
연 0.50% 기준금리는 이미 실효하한에 가까워진 상태... 넉 달 넘게 역대 최저 수준 유지 중...

DSR 규제 확대 임박…"상환능력 중심 종합 관리" — 아시아경제

가계대출을 억제 · 관리하기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가 임박했다는 관측... 현행 적용 비율의 하향, 적용 대상 확대 등의 방안이 예상...
"금융기관들과의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조율 및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신용대출 '월 2조' 각서 쓴 은행…서민 돈줄 막힐라 — 아시아경제

금융당국이 은행들로부터 가계신용대출을 월 2조원대로 유지하겠다는 각서를 제출받아...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른 은행들의 자율규제안...
은행들은 고신용, 고소득자를 핀셋 규제 한다지만....생활자금을 빌리려는 서민들까지 타격 받을 우려도...

KB국민은행, 소상공인 2차대출 '연 2.8%' 금리우대 한도 증액 — 서울경제

국민은행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을 연 2.8%의 우대금리로 지원하는 한도를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2배 늘려....
2차 금융지원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에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기반으로 긴급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상품... 1인당 한도는 최대 2천만원...

한국은 왜 외국계 보험사의 무덤이 됐나 — 머니S

외국계 보험사가 속속 한국시장을 떠나... 현재 시장환경은 저금리에 저출산까지 겹치며 보험업을 영위하기 더 어려워진 상태....
자기자본규제도 외국계 보험사가 한국시장에서 철수한 이유 중 하나... 외국계 보험사가 한국식 영업방식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소비자에 불리한 '보험계약 부활' 손본다 — 서울경제

금융당국은 보험계약의 부활 요건이 부당 승환계약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
"부당 승환계약 피해자 구제를 위해 만들어진 부활권이 오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검토 중"

금감원이 띄운 홍콩식 공매도…결정권 쥔 금융위 '신중 또 신중' — 데일리안

금감원이 '홍콩식 공배도 지정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실제 국내시장에 도입될지 주목... 금감원은 소형주에 대한 공메도 제한이 필요하다 판단...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공매도로 개미들만 피해보고 있다는 인식 여전... 금융위는 해당 방안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

손해 미확정 라임펀드도 분쟁조쟁…KB증권·우리은행 첫 대상 — 연합뉴스

금감원은 손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도 추정 손해액을 바탕으로 분쟁 조정을 시작하는 방안을 추진... KB증권과 우리은행이 첫 대상이 될 전망...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조정 결정을 통해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은 사후 정산하는 방식 적용...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